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법률안 지지 결의안

의안 번호	423
----------	-----

발의연월일 : 2008년 12월 15일

발 의 자 : 김학원 의원 외 8인

1. 주 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참여 지역 업체들을 기존 예정지역에서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 발의한 관련 법률안들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 결의하는 내용임.

2. 제안이유

가, 현행법상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참여 지역 업체들은 예정지역인 충청남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건설업체만이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편익과 비용부담의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나, 따라서, 이를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경쟁참가 자격을 부여하도록 개정 발의된 관련 법률안들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되도록 촉구 결의함.

- 1)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도록 촉구함.
- 2)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현행보다 확대 조정하도록 촉구함.
- 3)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관련 법률안들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촉구함.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법률안 지지 결의안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충청권 3개 시·도 주민 모두의 역량과 열정을 모아 이루어낸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며, 역사적인 사업으로써 ‘함께 잘 살아보자’는 상생과 협력의 자세로 충청권 공동 번영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지난 2006년 6월 19일 충청권 시·도지사 당선자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3개 시·도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차질 없는 추진을 적극 지원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에는 그 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지역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 채 기업도시와 혁신도시 건설, 공공기관 이전계획 등에서 제외되는 등 상대적인 역차별만 받아 왔다.

특히, 현행 국가계약 관련법령에서는 5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와 5억원 미만의 전문공사나 그 밖의 공사의 경우,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소재 건설업체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경기침체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전광역시의 건설업계는 커다란 상실감으로 허탈과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많은 중소건설업체들이 도산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토 동반 발전을 이루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청권의 모든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함이 마땅하다.

이를 위해 충청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여야 정파를 초월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우리 150만 대전시민과 지역 건설업계 모두는 매우 고무되어 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청권의 상생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충청권 건설업체들의 참여확대로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실질적 형평성이 실현되도록 관련 법률안들이 조속히 제·개정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 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예정지역·주변지역 및 그 인접지역이 포함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게도 제한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라.
- 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발주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율을 현행보다 확대 조정하라.

一,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대전지역 주민들과 건설업계의 열망을 담은 동 법률안을 반드시 원안대로 처리하라.

2008. 12.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관련 법률안 지지 결의안

찬성의원서명

[illegible]